‘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공감대 엿보여

- 건교위 국정감사 결산, 신행정수도 공방에 현안 이슈 소홀 아쉬움 -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건설부문의 주요 국정현안을 다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지난 10월 4일 건설교통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 서울시, 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10월 22일까지 3주동안 강행군을 계속하며 올해 국감을 마무리했다.

여전한 정쟁 행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27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정책자료집 발간 등 의원들의 의욕이 돋보였으나 정책 국감보다 ‘정쟁(政爭)’ 행태가 여전했다”며, “민생·정책국감은 못됐지만 국정전반을 파악하고 부정비리 질책 등 면에서는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이어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 △상시국감제도 입 △국감 인터넷 생중계 또는 TV 중계 추진 △1일 1기관 국감 등 집중도 강화 △국감 방해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논평을 통해 이번 국감 결과를 ‘연못에서 예쁘게 피어난 연꽃’에 비유하기도 했다. 또 2004년 국정을 직접 감사한 국회의원, 특히 초선의원 가운데 ‘변화와 희망’을 보았다는 평가가 상당수에 이르렀다.

건설부문 국감도 상황이 비슷했다.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간 소모적인 정쟁이 계속되면서 다른 정책 현안들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매년 되풀이되어 온 일부 민원성 질의나 고성, 피감 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등도 과거에 비해 줄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양한 국정현안에 대해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곳곳에서 포착돼 ‘정책 국감’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김학송의원(한나라당)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160여 쪽의 분량의 정책자료집 3권을 내택지공급제도, 공사입찰제도 등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정갑윤의원(한나라당)도 하도급비리 관련 정책자료집을 통해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신행정수도 공방

건설부문(건교위)은 물론 국정전반을 통틀어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역시 ‘신행정수도 이전 공방’이었다.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주무부처인 건교부에 대한 국감 첫날인 10월 4일에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국감이 끝날 정도로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신행정수도 문제를 ‘질문 1호’에 올릴 정도였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공방은 ‘국회와 정부 간 정책 공방’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정치 공방’에 머물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다 보니 여·야가 찬성과 반대로 양분돼 ‘평행선을 달리는 레일’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각자 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어느 것 하나 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지루한 공방만 계속됐다.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적 합의 없는 천도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와 여당도 “지난해 특별법까지 통과시켜 놓고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행 방침을 되풀이했다. 더욱이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의 전격적인 위헌결정이 이뤄진 직후에 열린 국감 마지막 날 도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관습헌법이나 경국대전 등 의 근거로 내려진 위헌판결의 문제점을,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대결을 거듭했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것을 놓고 벌인 동상이몽 같은 정치 공방 속에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는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엿보였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공공 택지 개선 대책

정부가 공공택지공급제도를 잘못 운영하는 바람에 애꿎은 서민들만 비싼 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있는 만큼 택지공급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신행정수도 공방과 달리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역시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웃돈’이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 택지를 주택건설업체들이 웃돈을 얹어 되팔아 앉은자리에서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기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의원들은 공공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택 용지가 실수요자

에게만공급되도록전매를강력히제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안으로△개발부담금 재도입 △주택 후분양제 도입 △택지개발사업독점구조개선등이제시되기도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개 · 폐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강래 의원(열린우리당)은“ 현행「택지개발촉진법」은 30여 년 전물량위주의주택공급을위해만든한시적법률인데다사유재산권침해소지가크고 민원도갈수록 늘고있다 ”며,“ 법적용대상을 수도권으로한정하는 등축소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고「도시개발법」을 활성화시키는것이타당하다 ”고주장했다.

수의계약에의한택지공급방식도도마위에올랐다. 특히일부의원들은“ 군인공제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 공공기관 ’으로 간주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뒤일부물량을일반 분양해막대한이익을 챙겼다 ”며 공공택지수의계약제도의문제점을강력하게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국감 기간 중인 10월 15일자로 이들 2개 기관을 공공택지 수의계약공급대상에서제외하도록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행정지시를내렸다. 건교부는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개정해공공택지우선또는 수의계약 대상 공공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고 채권입찰제(택지)가도입되는 내년 초부터시행하기로했다.

국민임대주택의 부진 원인과 대책

참여정부가 향후 10년 간 100만 가구를 짓기로한‘ 국민임대주택정책 ’에대한문제제기도 잇따랐다. 의원들은 주로 국민임대주택건설실적부진과허술한재원조달방안등을집중적으로추궁했다. 예컨대△지난8월말까지국민임대주택사업승인실적이 5,500여가구로올해목표대비 5%에그치고있는데과연 10만가구건설이가능한지, △전체 건설 물량 대부분을 짓고 있는 주공의재정악화우려, △정부계획과크게 빗나가고있는재정분담비율등에대해따져 물었다. 김동철 · 박상돈(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건설 비용 중 10%를 분담하기로 했던 사업시행자(주공)의실제 비용 분담률이 45%를넘어주공의자금 사정이악화되고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의건설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지적했다. 한선교(한나라당) 의원도“ 감사원조사결과국민임대주택건설로 주공의 부족 자금 누계액이 2018년까지 23조원에이를 전망 ”이라며,“ 서민주거 안정을 선전하기에 앞서 철저한 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을마련하라 ”고촉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국민임대주택건설비용을추정할때 2002년기준으로 평당 324만원을적용했지만택지비와공사비가크게상승해실제로는평당 417만원이 투입됐고 △지자체들의 소형 평형 기피로 건설평형이목표(평균 17.3평)보다큰 21.3평에달해건설비용이늘어날수밖에없게 됐다고해명했다. 건설실적부진에대해정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낮은 재정 능력이나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하는 바람에 지난해까지 건설 실적의 95%를 주공이 건설하는등지자체들의참여부족을가장큰 원인으로꼽았다.

정부는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단가를 예산 당국과 협의해 현실화하고 지자체 참여를유도하기위해재정지원확대와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설 경기 연착륙 대책과 부동산 정책

각종 규제 강화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 건설 경기 연착륙 방안 ’도 건설 부문 국감 의주요 현안으로등장했다. 상당수의원들이 주택 · 건설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연착륙대책이미흡한만큼이를보완해야한다는지적을제기했다. 또부동산시장이침체국면에 있는데도 가격 급등기에 검토된 재건축규제, 원가공개, 보유세인상등고강도 정책이 시행 · 추진되고있어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일부의원은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가시행되면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기존에시행중인재건축규제책을폐지하거나보완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부동산시장안정기조를유지하면서건설경기급락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는원칙을 재확인하고 중형 임대주택 세제 지원 등 주택 건설 촉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가을 이사철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뒤지방의투기억제제도를신축적으로운영하는등보완대책을검토해나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

대안 제시에는 미흡

정부가국가균형발전을위해추진중인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이나 △민간 복합도시(기업도시) △수도권발전방안등과함께 △최저가낙찰제등공사입찰제도△새집증후군△민자도로사업△골재수급대책△시공능력평가제도△해외건설대책 원가연동제등도이번건설부문 국정감사의이슈로등장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 현안이 신행정수도 공방에 묻히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원들이나피감 기관 모두이들정책에대한단순문제제기외에대안 제시나 해결책 모색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지적을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강황식
한국경제신문건설부동산부기자
hiskang@hankyung.com